

보 도 자 료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 ❖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 ❖ 장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_광화문 방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공동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 진행순서
 - 사회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 발언 1 : 기록은폐와 유출의 전력자, 윤석열의 사람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발언 2 :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 발언 3 : 02-700-8080으로부터 걸려온 격노의 전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압수수색 한 번 못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범죄 증거, 전부 사라질 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 발언 4 :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진선 사무국장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중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윤석열과 연루된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기록 은폐와 유출 의혹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발언문

[발언1] 기록은폐와 유출의 전력자, 윤석열의 사람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윤석열의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됩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통령이 퇴임하기 이전 1년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이 협의를 통해 이관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궐위 상태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력 배치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비서실에서 기록물을 반출하거나 임의적으로 비공개 설정 하지 못하도록 이동 및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서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합격자 2인 중 한명이 윤석열의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정아무개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절차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재직했던 정아무개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기록관리 실무 책임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던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무단유출과 과도한 보호기간 지정으로 인한 은폐 등으로 얼룩진 전례를 남겼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를 조사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어 밝혀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당시, 정 후보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서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기도 합니다. 임기가 끝날때까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고 이관한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절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종 비위 기록을 빼돌리게 방기했던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리더가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사안들을 모두 망라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내란죄와 권력남용, 각종 비위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란수괴 대통령을 위해 복무한 실무담당자가, 이미 과거 비리 관련 기록 무단유출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다면 12.3 비상계엄 기록을 비롯한 중요 역사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기록에 대해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정보의 경우 30년 까지도 비공개할 수 있는 보호기간 지정할 때도 *구체적인 건별 기간의 검토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의 실무자들이 논의하며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임기 내내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기에 비공개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여러 정보공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실이 과도한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 후보자가 지금 상황에서 이관의 총 책임자를 역임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 및 이관 절차의 신뢰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자격을 돌아보고 스스로 사퇴하여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절대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기록전문가협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실 실무자들과 논의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등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힘 (25/04/11 발언자 추가)**

[발언2]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윤복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주권자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기록은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국제기준상 ‘진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권리에 기반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의 공적 공개는 국제인권기준상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헌법상의 기본권 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남아공 등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기록의 공개를 아예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들, 채 상병 사망사건, 마약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로 발생한 국정농단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에 유력하게 떠오른 대통령기록관장 후보가 한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정농단의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을 모두 봉인시키고, 대통령의 각종 비위기록을 빼돌리도록 방기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된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겨우 시작될 수 있는 진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렇게 좌초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봉인할 것이 명백한 후보를 기록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의 은폐이자 피해자의 권리침해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할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의 임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발언3] 02-700-8080으로부터 걸려온 격노의 전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압수수색 한 번 못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범죄 증거, 전부 사라질 판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 과정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관계자들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방패 삼아 공수처 압수수색과 법원의 사실조치요청 등 수사, 사법절차에 모두 불응하고, 수시 때때로 위증을 일삼고 말을 바꿔왔습니다. 그들에겐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의혹과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해 온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추려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정오 경, 대통령실에서 02-700-8080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이 맞는가? 격노한 윤석열이 수화기 너머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종섭을 질책한 사실이 있는가?

참고로 두 가지에 대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을 맡았던 군사법원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사실조치요청을 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병사의 죽음을 두고 국가기관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대국민 사기극, 진실의 입을 막기 위해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을 짓밟고자 벌인 전방위적 집단린치의 증거들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인멸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기록관장에 은폐인멸 전문가가 임명된다면 차후 중단된 국정조사가 재개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고, 특검이 도입되어본들 아무 소득 없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어제 한덕수가 내란죄 피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한덕수의 판단이겠습니까, 윤석열의 판단이겠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하는 일 역시 한덕수의 몫이겠습니까, 윤석열의 몫이겠습니까?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수사와 사법절차를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는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이 파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권력을 쥐고 내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수많은 권력형 범죄를 역사의 미궁 속으로 던져넣을 것이 아니라면 솔한 진실을 구덩이에 파묻고 있는 내란잔당들의 손에서 권력부터 빼앗아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면으로 이뤄낸 주권자 시민의 승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놓치 말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발언4]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이영남)

○ 무엇보다 대통령기록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퇴임하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퇴임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퇴임하는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치세력을 지키는 자리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기록관장은 원래부터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이 선출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대통령 직무수행을 철저히 기록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퇴임할 때는 그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기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런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취지를 최선두에서 지키면서, 대통령기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과정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정말 퇴임하는 대통령을 위한 자리로 악용하는 것이다. 또한 퇴임하는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치세력을 지키기 위한 자리로도 악용하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기록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에 의해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당했다. 그 결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요구되는 민주주의 기본소양과 기록관리 전문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성도 훼손되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간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기록관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과정은 철저히 탄핵당한 대통령의 시각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다.

○ 현 시점,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 소양과 혁신역량에 기반한 전문성과 책임윤리’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정체성은 국민을 위한 기록관리시설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기록으로 돌려받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장은 중요한 대통령기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설로 대통령기록관을 탈바꿈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 소양이다.

현 시점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혁신역량에 기반한 전문성이다.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그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탄핵 이후에 중책을 맡게 될 대통령기록관장은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낡은 제도를 바꿔야 하고, 또한 새로운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에 기반을 둔 전문성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에 설립이 되어 이제 설립된 지 18년이 경과하고 있다. 현재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이 이관되면, 대통령기록관은 이제 다섯 명의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시설이 된다. 그 중 두 명의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은 탄생 이후, 두 번째 국면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기자회견문

윤석열 비서실 출신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후보 중 1인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자다. 그때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으며, 이 후보자는 해당 대통령기록유출 건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법률에 따라 임기 5년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며,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중립적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가치인 독립성 및 객관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태가 윤석열 정부 기록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당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02-2039-8361 / cmj@opengirok.or.kr)

배포일시 : 2025년 4월 9일 오전 11시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권한대행 시기의 중요 인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이해충돌이 명백한 인사 임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윤리의식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내란정권의 부역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진사퇴해야 한다. 기록 은폐와 유출의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제한하고, 기록물 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헌정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문건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등 중대한 범죄 의혹과 관련된 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진실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비상행동 후원)**

※ 기자회견 사진



담당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02-2039-8361 / cmj@opengirok.or.kr)

배포일시 : 2025년 4월 9일 오전 11시



담당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02-2039-8361 / cmj@opengirok.or.kr)

배포일시 : 2025년 4월 9일 오전 11시



담당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02-2039-8361 / cmj@opengirok.or.kr)

배포일시 : 2025년 4월 9일 오전 11시